

2023. 12. 19.(화)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심 사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차 례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 원안가결 (8), 수정의결(1)

〈원안〉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원안〉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안〉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안〉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안〉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수정〉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원안〉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원안〉 충주중원문화재단 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3호

나. 제 안 자: 김낙우 의원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재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실화, 명확화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충주시 축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효율적인 축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등(안 제3조 ~ 제5조)
- 축제의 안전관리 등(안 제6조 ~ 제7조)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주시 축제위원회로 하고 충주시 축제 운영과 지원대상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 됨.

○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택견, 무술, 온천, 충주호 등 관련 사업으로 국한 되었던 것을 관광·문화 관련 축제로 변경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u>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4조(보조금 지원) ----- <u>다음</u> -----
1.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u>택견의 세계화와 무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u>	1. <u>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축제</u>
2. <u>온천 관광지, 충주호를 비롯한 주요 관광명소를 활성화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u>	2. <u>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u>
3. <u>우수 농·특산물, 향토 음식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u>	3. ----- <u>축제</u>
4. <u>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4. <u>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u>

-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¹⁾이나 조례를 따르게 변경함. 이는 23. 9. 22.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를 따르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6조(안전관리) ① (생략) ② 주관단체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하여 축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21일 전까지 축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축제 담당 부서에서는 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심의 후 통보되는 보완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충주시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함.

○ 종합 검토 의견

- 2019. 2.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되고 3월 공포되어 해당 조례에 따른 축제계획 심의와 사후관리를 위해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현재까지 운영 중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는 따라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 12. 31. 까지이므로 정책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존폐를 결정 해야 함.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는 2019년 1회, 2020년, 2021년 미 개최²⁾, 2022년 2회, 2023년 3회 개최되어 축제계획 사전 심의와 축제결과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개최일시	주요내용	심의안건
2019. 11. 22.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 제35회 수안보온천제 ○ 제22회 양성탄산온천축제 ○ 제49회 우륵문화제 ○ 2019 충주농산물한마당축제 ○ 2019 충주세계무술축제
2022. 5. 30.	축제 추진계획 심의	○ 2022 충주호수축제 추진계획
2022. 9. 7.	축제 추진계획 심의	○ 제38회 수안보온천제 추진계획 ○ 제23회 양성탄산온천축제 추진계획
2023. 3. 21.	축제 추진계획 심의	○ 제10회 충주호 벚꽃축제 추진계획 ○ 제39회 수안보온천제 추진계획
2023. 5. 24.	축제 추진계획 심의	○ 2023년 충주시 다이버 페스티벌 추진계획
2023. 8. 11.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 다이버페스티벌 평가 및 분석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개최 일지>

- 위와 같이 충주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이 있으며 입법 행정력 낭비를 위해 부

2)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칙에 따라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조례안에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충주시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무술저변 확대 사업 등 현재는 폐지된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현실화 하고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하는 등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4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자치행정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도모
-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이·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
- 공동주택 신축 인구 증가지역 리·반 증설
 - 대소원면 중앙하이츠아파트(274세대) 리반 증설(+1리, +5반)
 - 중앙탑면 한화포레나아파트(478세대) 리반 증설(+1리, +6반)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리·반증설과 이·통장 활동을 위한 통신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23. 9. 준공된 대소원면 중앙하이츠아파트(274세대)의 당저5리(5반) 신설, 23. 10. 준공된 중앙탑면 서충주 한화포레나(478세대)의 갈동16리(6반) 신설과 충주시 이·통장 800여명에 대한 월 2만원 통신비 지원이며 이로 인한 비용 추계는 연 2억원정도임.
- 서충주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당 이장의 수는 429세대당 1명꼴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5~6동에 1명의 이장, 아파트 1동에 1반장을 두고 있음.

읍면동	공동주택명	세대수	이통장 수	세대수/이통장 수	비 고
대소원면	코아루아파트	603	1	603	8반
대소원면	지웰아파트	602	1	602	8반
대소원면	오드카운티	534	1	534	8반
중앙탑면	미진이지비아	782	2	391	11반
중앙탑면	시티자이	1,596	4	399	20반
중앙탑면	e편한세상	1,455	4	364	19반
중앙탑면	신우회가로	741	2	371	10반
중앙탑면	코아루더테라스	170	1	170	5반
계		6,483	16	3,434	89반
평균(8개소)		810	2	429	11반

〈서충주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수 및 이통장 수〉

- 서충주 공동주택과 단순 비교 하였을 때 중앙하이츠아파트의 경우 이장 1명당 세대수가 155세대 적고 한화포레나아파트의 경우 이장 1명당 세대수가 49세대 많으며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 1동

1반장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충주시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기본수당 월 300,000원, 명절 상여금 연 200%(600,000원),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 2만원(월 2회)가 지급 되고 있음.
- 이·통장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와 복지 행정분야에서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활동보상금 기본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23. 11. 개정하여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려는 등 이·통장 처우 개선을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부·보조, 그 밖에公款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을 보조하는 이·통장의 역할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통신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면 이·통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이·통장 제도 현황 및 처우개선 방안[행정안전부]

□ 제도현황

- (개요) 읍면동 시책을 보조, 지역공동체의 리더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 위촉·운영되는 읍면동 행정의 보조자

- (인원) 98,639명(이장 37,676명, 통장 60,963명) ※ 22년말 기준
- (역할·기능) 읍면동장 감독하에 행정의 보조, 지역리더 역할 수행

■ 주요임무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보고
-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파악
- 계절적 재난(호우, 태풍, 폭설)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 관내 사건사고 보고 및 재해(수해·제설) 시설 점검과 복구 협조 등
- 저소득 긴급복지·위기가정 발굴, 현장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

□ 기본수당 인상

- (인상규모) 월 10만원 인상 (30만원→40만원)

※ (현재) 기본수당 월 3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인상) 기본수당 월 4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 (시기 / 소요예산) '24. 1월 / 연 1,381억원* (시군구 평균 6.1억원)

* 228개 자치단체(226개 시·군·구 및 제주·세종)가 10만원 인상시 소요금액

- (조치계획)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개정* 및 통보(11월중)

* 기본수당 상한액을 '40만원 이내'로 개정 /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법적근거 마련

- (주요내용)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그 외 운영·지원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 운영

*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둠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5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자치행정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1,509명 → 1,498명 (△ 11)

○ 집행기관 : 1,475명 → 1,464명 (△ 11)

○ 의회사무기구 : 34명 (변동없음)

나. 정원조정내역

○ 일반직 : 1,461명 → 1,449 (△ 12)

• 6급이하 : 1,376명 → 1,360명 (△ 16)

• 전문경력관 : 3명 → 7명 (+4)

○ 지도·연구직 : 45명 → 46 (+1)

• 지도·연구사 : 41명 → 42 (+1)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 11명을 감축하고자 제안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6명 감축, 시간선택임기제인 평생교육사와 운동처방사를 전문경력관으로 4명 증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도·연구직 1명 증원으로 총 정원 11명 감축임.
- 2023. 6.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해당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 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 정원 감축 지자체에 기준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1% 이상 재배치 자치단체에 특교세 인센티브 부여 등임.
- 충주시의 경우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실정³⁾이며 기준인건비 인센티브 및 특교세 인센티브를 위한 정원감축과 인력 재배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3) 재정자립도 18.17%, 충북시군 4위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6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자치행정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사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서 명칭변경(안 제6조)
 -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 경제건설국 도시계획과
- 소관사무조정(안 제6조, 안 제17조)
 - 하천관리 업무: 지역개발과 → 환경수자원본부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과 하천업무를 환경수자원과로 이관하고자 제안 된 것임.
- 정부에서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 수량, 재해 업무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2022. 1. 1.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 충주시의 경우 하천의 이·치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생태하천, 하천수질에 관한 사항은 환경수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부조직과 같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 이·치수 업무를 환경수자원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하천업무 수행과 중앙정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7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회계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정부조직법개편에 맞춰 행정기관장 명칭을 개정하고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제38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
- [별표1]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7조관련)
 - 나. 부속공간 면적 표에 청소근로자휴게실 : 2.0㎡ x 청소근로자 수 추가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제1항에 따라 청사 부속공간의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도 특이사항이 없음.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8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문화예술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중원문화재단의 관광사업분야 역할 강화와 중복된 지명사용 개선을 위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관광사업 수행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명칭변경 및 관광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 조항 개정 및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충주중원문화재단의 명칭 변경과 관광사업분야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충주중원문화재단은 2006. 8.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으로 최초 설립되어 2017. 1.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에서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재단의 사업 또한 스포츠 레저, 체육관광 관련 연구 개발 업무 등이 사라지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 됨.
- 2023년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자체사업은 충주문화버스킹 등 총 17개로 모두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나 집행기관의 사업증가와 재단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관련 사업인 장자늬카누체험 운영, 체험관광센터 운영, 탄금호 피크닉공원 운영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이미 관광관련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관광분야의 역할이 커졌고 재단의 명칭 변경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문화관광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재단의 관광 자체사업 발굴 등의 효과로 시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한자어의 쉬운말 변경과 자구 수정으로 별도 특이 사항이 없음.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59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문화예술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수정의결**

1 제안설명 요지

- 문화시설 이용자의 대관 및 사용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 개정
 - 음향시설 녹음기 항목 ” CD, 카세트테이프” 를 삭제
 - 무대시설 항목 “현수막 게첨” 삭제하고 “댄스플로어” 추가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 항목 “충주시 문화회관” 을 “문화회관 공연장” , “문화회관 및 관아갤러리 전시실 “로 구분하고, “유류 및 전기사용료 시가” 를 정가로 조정 → 세부자료 별첨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문화시설(문화회관, 호암예술관 강당 등) 사용료를 변경·삭제·추가 하고자 제안 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 153조 및 제1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따른 문화시설도 공공시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용료를 변경·삭제·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

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수정의결

⑥ 첨부서류

-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659-1
------------	--------

제출일자 : 2023. 12. 19.

제 출 자 :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 제2호 문화시설 사용료 수정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문화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시 설 명					
피 아 노		그랜드대형	1회	30,000	· 공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음 향	음 향 설 비		1회	10,000	· 유선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시 1대당 2,000 원 가산
	무선마이크		1대	5,000	
	녹음기		1회	10,000	· 녹음, 녹화 시 소모품 사용자 부담
조 명	공연장	충주시문화회관	1회	40,000	·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호암예술관	1회	35,000	
	전시실, 관아갤러리		1일	10,000	
	포 그 기		1회	15,000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1회	30,000	
	이동식합창단		1회	20,000	
	댄스플로어		1회	20,000	· 관련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LCD	1회	20,0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	문화회관 공연장	냉방	1시간	30,000	
		난방	1시간	50,000	
	문화회관 전시실 및 관아갤러리 전시실	냉·난방	1일	20,000	
	호암예술관		1회/ 1시간	40,000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671호
- 나. 제 안 자: 충주시장(회계과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충주시장학회의 사무실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소 재 지: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충주시청 10층
- 수허가자: 충주시장학회 ※ 충주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
- 허가목적: 업무시설(사무실)
- 허가면적: 107.4㎡
- 사용기간: 2024. 1. 1. ~ 2026. 12. 31.
- 감면추계액: 13,746천원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충주시청사 사무실을 충주시 장학회에 24. 1. 1. ~ 26. 12. 31. 3년간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 충주시 장학회는 청사 입주부터 현재까지 유상으로 시청사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최근 23년 사용료로 1,759,450원을 납부함.
-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음.
- 충주시청사는 「공유재산법」 제5조 상 행정재산(공용재산)이며 충주시 장학회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세(시세)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 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장학회 기본재산 지분의 27%를 출연하였으므로 의회 동의를 있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장학회 청사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
- 충주시 장학회는 2022년 120명의 학생들에게 278,000천원의 장학금을 수혜⁴⁾하는 등 충주시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청사 사용료 감면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장학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 됨.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4) 2022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충주시장학회)

제5조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 4. (생략)

③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672호

나. 제 안 자: 충주시장(문화예술과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1월 21일

마. 상정일자: 2023년 12월 05일

바. 의결일자: 2023년 12월 05일

-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가 출연한 충주중원문화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재산위치: ①충주시 문화동 2789 충주음악창작소 2층 (191.74㎡)
②충주시 성내동 215 충주문화회관 2층 (370.75㎡)
- 수허가자: 충주중원문화재단 ※ 충주시 출연기관
- 허가목적: 업무시설(사무실)
- 허가면적: 562.49㎡
- 사용기간: ①충주음악창작소 2024. 1. ~ 2026. 1.(3년간)

②충주문화회관 2024. 1. ~ 2025. 7.(1년 7개월간)

○ 감면추계액: 41,028천원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중원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창작소 및 문화회관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충주중원문화재단은 2023년 충주음악창작소와 충주문화회관 사용료로 약 15,000천원을 지불함.

재산위치	허가기간	연 사용료(원)	사용현황
충주음악창작소	23. 1. 1. ~ 23. 12. 31.	8,211,960	예술지원팀, 문화사업팀, 문화관광팀
충주문화회관	20. 7. 31. ~ 25. 7. 30.	6,887,160	기획운영팀, 문화정책팀, 문화도시기획팀
계		15,099,120	

<2023년 중원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 내역 및 현황>

- 음악창작소, 문화회관은 「공유재산법」 제5조 상 행정재산이며 중원문화재단은 충주시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의회 동의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출연금(306-01) 운영비에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포함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임대료(211-02)로 세입조치 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 손실은 사실 상 없다고 판단 됨.

-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중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제5조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 4. (생략)

③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